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 검토 농가피해 최소화 방안 충분히 고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1월 21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지난 2월 9일 경기도 안성에 이르기까지 6차례 발생하면서 꾸준한 발병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신속한 신고에 따른 발빠른 병성감정, 살처분, 방역 등의 대응으로 발생지에서부터의 확산방지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지난해 HPAI가 발생한 이후 살처분 및 보상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고 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양계인들은 살처분 범위에 대해 3km까지 확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발생한 6차례의 경우 모두 3km의 닭과 오리들 모두 살처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는 살처분 범위를 발생지 또는 오염지역(500m)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살처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지역 3km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및 그 생산물의 폐기를 확대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검역원장이 농림부에 건의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은 이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km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처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살처분을 고집할 경우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살처분에 따르는 인원동원 문제, 매몰 후 오염문제 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발생농장 주변으로 농장수가 적거나 오염의 확률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지역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할 경우는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처럼 대규모 농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살처분 범위 확대 정책이 아닌 백신 병용정책을 충분히 고려해볼 시기가 되지 않겠나 여겨진다. 국내에도 이미 HPAI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HPAI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이미 유수의 업체들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각 관련단체 및 업계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

지침에 대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발생농장만을 살처분시키고 나머지는 예찰 또는 백신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백신을 사용할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허락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HPAI행동지침에 명기를 시켜 만의하나 발생할 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하는 세심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대책 등 바뀌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육용 원종계업계 쿼터제 요원한가?

금년 원종계 수입량 적정 사육수수의 2배 육박

지난 2003년 11월 육용원종 3사들이 원종계 감축에 적극 동참하면서 소위 종계 쿼터제가 자리를 잡는 듯 했다. 정부에서는 도태지원금을 지급하면서까지 94,000수 유지에 적극 나섰다. 당시 24,700수(D라인 기준)가 도태되면서 향후 종계업계는 물론 육계업계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육계산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원종계의 과잉입식이라 분석하고 원종계 적정 사육수수인 9만수의 원종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원종계 3사와 수차례의 협상을 벌인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시킨 바 있다.

하지만 원종계업계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온다는 의견들이 팽배해졌고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면서 쿼터제가 시행된지 2년여만인 지난 2005년 말 쿼터제가 사라져갔다. 이후 2006년도에는 한 업체의 원종사업 편승과 함께 수입물량이 141,600수가 수입이되면서 금년도 육용종계 분양수수도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 수입 예정물량은 195,000수로 집계되면서 차후 육계업계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모든 원종계사들은 서로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의 현상을 들고 있는데 종계사료가 20% 이상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아리는 부족한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병아리 공급은 원종계 수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품질 경쟁시대이니 만큼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병아리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물론 생산성이 나빠 수입수수와 무관할 수도 있으며, 환우가 현재 많이 들어간 상태이니 만큼 이 또한 변수가 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등으로 인한 닭고기 수입이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닭고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종계사육수수는 600만수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금보다 향상될 경우 추가되는 병아리의 처분이 불가피하며, 어느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현상까지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쿼터제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원종계사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현재 적정

수수인 12만수 전후의 원종계유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높이만 가는 계란 DC가격 계란유통구조 개선 절실

언제부터인가 계란 DC가격이 40원에 고정된 느낌이다. 계란가격이 개당 100원 넘게 발표되는데도 생산자로부터의 수취가격은 생산비선에 훨씬 못미치는 6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계란 DC가격은 근본적으로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덤핑판매, 일명 선판매 후결제방식인 '후장기' 제도, 환우에 의한 계란품질 저하, 대형 할인마트의 세일행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15년 전 DC가격이 2원에 형성되던 것에 비해 20배가 증가한 것이며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초 농가 수취가격이 50~60원대를 기록할 때 계란 운송비인 2원정도로 DC가 이루어졌으며, 이것마저도 생산자들과 상인들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그러던 것이 10원대, 20원대로 증가하였고 계란가격 현실화를 위한 조치도 여러번 시행했으나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고 오히려 탄력을 받아 DC가격만 증가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생산자 조사, 발표가격이 이제는 판매의 최종단계인 상인 판매가격을 알려주는 단계에 까지 다다른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상인들이 가격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부 관련업체에서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를 이용하여 시세를 알려주고 버젓이 돈벌이 수단으로 수년간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계란유통이 대대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지나해 산란총계 418,000수 입식에도 불구하고 산란실용계 수수가 적정사육수수인 5,000만수를 넘어선 5,700만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농장에서 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노계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가 노령화로 가면서 노인들의 노후 시설 및 부양인구 부족 등 사회적 부담과 문제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환우가 늘고 노계로부터의 생산이 많아질수록 계란의 질은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계란들은 상인들로부터 좋은 가격을 받기 힘들다. 결국 이러한 계란들은 일명 '덤핑' 계란으로 둔갑하여 품질이 좋은 다른 계란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다.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것처럼 이러한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계란을 덜 찾게 되고 1인당 200개 이상까지 올려놓았던 1인당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그나마 겨울이기 때문에 보관에 어려움이 없지만 5, 6월 비수기 철이 다가올 경우 이대로 가다가는 큰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금년에는 DC 5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면서 유통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